
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

2021. 1. 20.

관 계 기 관 합 동

순 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추진배경 | 1 |
| II . 현황 및 문제점 | 3 |
| III . 개선방안 | 7 |
| 1. 금융회사 관리 · 대응 역량 제고 | |
| 2.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| |
| 3.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 | |
| 4. 거버넌스 및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개선 | |
| IV . 향후 계획 및 조치 사항 | 15 |

I. 추진배경

- 과거 두 차례 위기('97년, '08년)를 겪으며 외환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지속 정비·보완
 - ('97년) 기업 부실화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, 외화자산·부채 만기 미스매치, 외환보유액 고갈 등이 외환위기 촉발
 - 외환보유액 확충 및 외채 관리 노력과 함께 만기 불일치 축소를 위해 외화유동성 비율('97.7월), 갭비율('99.1월) 규제 도입
 - ('08년)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속에 은행권 단기외채 증가,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이 취약요인으로 부각
 - 단기외채 축소,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('10.10월), 외환건전성 부담금('11.8월) 등 거시건전성 조치 도입
 -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정비('10.10월)하고,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LCR 규제 시행('17.1월)
- '20.3월 외환·외화자금시장은 '08년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 경험
 - 외환시장에서 원/달러 환율은 급격한 수급쏙림 등으로 '09.7월 이후 처음으로 1,290원대(3.19일 장중 최고치 1,296.0원)까지 급등
 - 외화자금시장도 보험사 환헤지 수요 등으로 구조적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수요 등이 급증하며 유동성 경색 발생(1개월물 스왑레이트(3.23일 △4.3%) '08.12월 이후 최저)
 - 특히, 韓美 통화스왑(3.19일) 이전 원화 약세폭 등 감안시 대외 요인 외에 국내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

'20.3.4일~3.19일(韓美 통화스왑 체결) 중 주요통화 절상률

| 한국 | 달러 | 일본 | 유로 | 영국 | 호주 | 중국 | 대만 | 싱가폴 | 인니 | 남아공 | 러시아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△7.6 | +4.0 | △1.0 | △1.9 | △9.7 | △13.8 | △2.2 | △1.4 | △4.1 | △10.7 | △11.8 | △17.9 |

□ 국내에서는 '08년과 달리 은행권*은 강화된 규제 등을 바탕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인 반면, 비은행권이 위기진원으로 작용

* 일반은행 외화 LCR(%): ('19말)122.7 ('20.2말)129.0 (3말)113.4 (6말)121.4 (7말)111.1

○ '08년의 경우 은행권의 단기차입 상환,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으로 시장불안 확대

○ 반면, '20.3월의 경우 증권사 파생거래(ELS 등) 증거금 납입* 등 비은행권 단기 외화수요 급증이 시장불안 촉발

* 14개 증권사 증거금 순송금액(조원) : (3.2-3.6일)1.3 (3.9-3.16일)8.4 (3.17-3.31일)0.3

- 기관투자자 해외증권투자 유출도 지속되면서 외화자금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반면, 은행권 차입은 안정적 유지

'08년 위기와 '20.3월 위기 시장불안 촉발요인 및 외환수급 비교

| | 글로벌 금융위기('08.10월) | 코로나19 위기('20.3월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진원 | 은행권 | 비은행 금융회사 |
| 촉발요인 | 단기차입 차환 수요 | 파생 등 단기 외화수요 급증 |
| 세부요인별 외환수급 (억불) | ▶ 외국인증권투자 $\Delta 79.3$ ▶ 해외증권투자 +41.6 ▶ 은행권 차입 $\Delta 267.3$ | ▶ 외국인증권투자 $\Delta 44.7$ ▶ 해외증권투자 $\Delta 12.2$ ▶ 은행권 차입 +45.0 ▶ 파생상품 관련 $\Delta 108.3$ |
| * (+) 유입 / (Δ)유출 | | |

□ IMF¹⁾, BIS²⁾ 등도 글로벌 달러조달의 취약성,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 증가 등을 지적하고 관련제도 개선 필요성 등 제기

* 1) IMF('19.10월 GSFR): ①고위험·저유동성 자산투자(아시아권 해외투자)로 비은행권 취약성 증가 → 감독·정보공개 강화, 유동성 기준 마련 등 필요 / ②非미국 은행 달러조달 취약성↑ → 모니터링(유동성 비율, 장기조달 비율 등) + 스트레스 테스트

2) BIS('20.4월): 달러조달 관련 은행권 리스크는 감소한 반면, 비은행권 리스크 증가 → 정보공개 강화, 외화유동성 규제 강화, 유동성 공급체계 마련 등 필요

⇒ 3월 시장불안을 초래한 비은행권 외환부문 취약성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외환건전성 제도 개선 검토

Ⅱ. 현황 및 문제점

① (영업행태) 비은행권 외환익스포저 확대, 통화기간 미스매치 등 심화

- (비은행권 외환익스포저 확대)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비은행권 외화자산·부채가 빠르게 증가

업권별 금융회사 외화자산·부채 증가 현황(억불, %)

| 구 분 | | '16년말(A) | '17년말 | '18년말 | '19년말(B) | '17~19년 증감(B-A) | |
|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은행 | 외화자산 | 2,711.0 | 2,956.2 | 2,970.2 | 3,148.2 | +437.2 | +16.1% |
| | 외화부채 | 2,741.6 | 3,034.2 | 3,034.4 | 3,270.6 | +529.0 | +19.3% |
| 보험 | 외화자산 | 807.1 | 946.1 | 1,353.5 | 1,463.7 | +656.6 | +81.4% |
| | 외화부채 | 70.8 | 58.2 | 91.3 | 99.1 | +28.3 | +40.0% |
| 증권 | 외화자산 | 259.2 | 597.6 | 846.4 | 949.9 | +690.7 | +266.5% |
| | 외화부채 | 160.1 | 498.3 | 813.5 | 928.4 | +768.3 | +479.9% |

- (리스크 확대) 민간 해외투자 증가는 대외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이나, 통화·만기 미스매치, 우발적 외화수요 등 비은행권의 리스크 확대

- (통화 미스매치) 대부분 원화조달(예탁금·보험료 등) - 외화운용 구조

- 외화조달시 해외 직접조달은 제한적*이며 주로 국내시장(현물환, FX스왑 등)에 의존하나, 위기시 국내시장 위축으로 조달애로 증가

* 비은행 금융회사 대외채권·채무('20.9월말, 억불): (채권)2,044 > (채무)417

- (만기 미스매치) FX스왑 등은 주로 단기로 조달하며, 중장기 외화조달은 낮은 신용도, 높은 비용 등으로 제한적 활용

- 위기시 시장여건 악화로 차환 리스크 확대, 유동성 경색 초래

- (우발적 외화수요) 고위험·저유동성 자산 투자가 증가*했으나, 자체 외화유동성 위험 관리기준(유사시 외화조달계획 등) 등 미흡

*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(조원): ('14년말)84.1 → ('20.9월말)100.9

② (규제 · 모니터링) 은행권 위주로 비은행권 리스크 억제에는 한계

- ① (규제) 소업권에 걸쳐 다양한 외환건전성 규제가 시행중이나,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 규제 강도·실효성 제한적

외환건전성 규제·모니터링 체계

| | 외환건전성 규제 | 모니터링 지표 | 스트레스 테스트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은행 | ○(強) (외화LCR,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, 종합·선물환포지션, 외환건전성 부담금) | ○ (외화여유자금 등) | ○ |
| 금융투자 | △(弱) | × | × |
| 보험 | (외화유동성 비율, 종합·선물환포지션*, 외환건전성 부담금) | × | × |
| 여전 | * (금투)종합·선물환, (보험)종합, (여전)未적용 | × | × |

- (비은행권) 외화LCR 대신 외화유동성 비율을 적용 중이나, 실효성에 한계* (☞참고1)

* 예: (자산분류) 처분이 제한되는 파생상품 필요증거금 등이 유동성자산에 포함 (점검대상) 현물부채 기준 선정 → 보험사(외화자산 多, 현물부채 少) 상당수 제외 (점검주기) 분기단위별 점검체계 → 시의성 부족

- 취약한 조달역량에도 불구하고, 조달 관련 규제·모니터링 부재

- (은행권) 대체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, 외화LCR¹⁾, 외환건전성 부담금²⁾ 관련 일부 미비점 존재

* 1) 예: 월중 평잔 산정 → 계절성 문제(월초반 LCR↓ → 월후반 LCR↑) 발생
2) 한시적 감면(20.4~6월)시 탄력적 운용, 공제제도 효과성 등 보완 필요성 제기

- (기타) 지주회사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, 외환건전성 측면에서 지주회사 차원의 규제, 리스크 관리체계 부재*

* 예: 同지주내 외화유동성이 은행은 풍부, 증권은 부족하나, 지주차원의 대응체계 부재

- ② (모니터링)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*하고,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도 未실시

* 은행권은 외화여유자금(日 단위), 외화LCR(月),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(분기) 등 모니터링

- 특히, 외환 관련 파생상품 등 비은행권의 우발적 외화수요 유발 행위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부재

참고 1

외환건전성 규제 세부현황

| 구 분 | 도입 시기 | 산 출 방 식 | 대 상 및 비 율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은행 | 금투 | 보험 | 여전 |
| 외화LCR | '17.1월 | 고유동성 외화자산 / 향후 30일 이내 외화 순현금유출 | ≥80% | × | × | × |
| 외화유동성 비 율 | '97.7월 | 외화유동성 자산 / 외화유동성 부채 | × | ≥80% | ≥80% | ≥80% |
|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비율 | '91.1월 | 1년초과 외화조달잔액 / 1년이상 외화대출잔액 | ≥100% | × | × | × |
| 7일/1개월 갭 비 율 | '99.1월 /'91.1월 | 기간별(외화자산-외화부채) / 총 외화자산 | × | ≥0% ≥△10% | ≥0% ≥△10% | ≥0% ≥△10% |
| 선물환 포지션 | '10.10월 | 선물 외화자산-선물 외화부채 / 전월말 자기자본 | ≤50% 250% (외은지점) | ≤50% | × | × |
| 종 합 포지션 | '81.4월 | 통화별 Max (Σ매도초과포지션, Σ매수초과포지션) / 전월말 자기자본 (보험사: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) | ≤50% | ≤50% | ≤20% | × |
| 외환건전성 부담금 | '11.8월 | 비에금성외화부채 (총외화부채-외화예수금 등) | 10bp | 10bp | 10bp | 10bp |
| 외화유동성 위험 관리기준 | '10.1월 | 외화유동성 위험 관련 관리기준 자체 설정·운용 | ○ | X | X | X |
| 외환 파생상품 거래 위험 관리기준 | '10.7월 |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 관리기준 자체 설정·운용 | △ (고객 오버헤지 방지에 국한) | △ (파생결합 증권 등 未포함) | ○ | ○ |

③ (거버넌스) 권한·운용 분산, 협의체계 미흡으로 위기시 신속대응 한계

① (권한 분산) 외환건전성 제도의 운용기관 및 권한 등이 분산* 되어 있어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 대응 제약

* 외국환거래법령상 기재부 장관 권한을 韓銀·금융위·금감원에 포괄 위탁 → 은행 포지션·외환건전성 부담금 外 대다수 규제가 업권별 감독규정에 규정

- 각 기관들의 외환업무 영역과 전문성 등이 상이(거시 vs 미시, 시장 vs 기관)하여 기관간 정보공유 부족
- 위기시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협의체계 미흡

② (기관별 역량 제한) 기재부의 외환분석 및 금감원의 외환감독 기능 등 개별기관 역량 보완 필요

- 기재부는 외환정책의 최종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, 인력·조직 제한 등으로 자체적인 외환분석 역량에 한계
- 금감원 외환감독도 은행 위주로, 비은행권 관련 기능 부족

④ (외화유동성 공급) 보유액에 과도한 의존, 위기시 전달체계 한계

① (외환보유액 중심의 단층적 체계) 민간부문의 외화자산 보유가 증가했으나, 유사시 대외 안전판 역할은 미흡

- 3월에도 연기금, 보험사 등의 외화자산 환류(회수)는 제한적* 이었고, 시장안정은 외환당국 외화유동성 공급에만 의존

* 부채 듀레이션(장기) 매칭을 위해 장기물 외화자산 처분이 실질적으로 제약

② (전달체계 한계) 유사시 당국의 외화유동성 공급효과가 최종 수요자(비은행권, 기업 등)에게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한계*

* 외환당국 → 은행(외화대출 등 유동성 공급대상) ⇨ 他 시장참가자(증권, 보험, 기업 등)

* BIS도 중개기능 약화 등으로 유동성이 최종수요자에 공급되지 않는 위험 지적

- 특히, 유사시 은행권의 중개기능이 보수화*되어 신용도가 낮고 적정담보가 부족한 비은행권 등과의 거래(외화대출 등) 위축

* 일부 은행은 비은행권의 신용도·담보부족 문제로 RP, 외화대출 거래 등에 소극적

Ⅲ. 개선방안

추진 목표

- ◆ 금융회사 자체 외화유동성 관리·대응 역량 강화
- ◆ 외환건전성 모니터링 체계 및 규제 개선
- ◆ 위기대응에 효율적인 거버넌스 및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

추진 방향

세부 과제

1. 금융회사 관리·대응 역량 제고

- ① 금융회사별 자체 위험관리 강화
- ② 금융그룹 단위 관리·대응 체계 마련
- ③ 비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관리 역량 제고 유도

2.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

(1)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개선

- ① 「외화자금 조달·소요 지표」
- ② 「외화자산·부채 갭 지표」
- ③ 「외화조달·운용관리 지표」

(2)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확대

- ①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대상 확대
- ② "Bottom-Up" 스트레스 테스트 병행
- ③ 모니터링 지표와 연계 강화

(3)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점검 강화

- ① 비은행권 점검사항 확대 및 주기 단축
- ② 비은행권 속보성 지표 탄력 운용
- ③ 외환전산망 개선 및 활용 제고
- ④ 비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모니터링 강화

3.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

(1) 기존 규제 미비점 보완

- ① 외화유동성 비율 기준 개선 및 적시성 등 강화
- ② 외화LCR 속보성 점검 등 병행
- ③ 외환건전성 부담금 재정비

(2) 리스크 요인별 특화 규제 도입

- ① 증권사 적정 외화자산 의무 보유
- ② 보험사 장기 환헤지 유도
- ③ 보험사 탄력적 환헤지 지원

4. 거버넌스 및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개편

(1) 정책협의·추진체계 개선

- ① 외환건전성협의회(가칭) 신설
- ② 외환당국·감독당국 기능 강화

(2) 다층적 외화유동성 공급망 구축

- ①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마련
- ② 은행의 비은행권 실수요 외화대출 지원
- ③ 환매조건부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망 도입

1. 금융회사 관리·대응 역량 제고

◇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, 금융그룹 단위 관리체계 도입

①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·외환파생거래에 대한 “자체 위험 관리기준”을 보완·마련하도록 하여 외환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

* 감독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위험상황에 대한 평가기준, 대응계획 등 수립

- (외화유동성)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위험관리기준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나, 향후 금투·보험업 등에도 확대 적용*

* 자산·부채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큰 금융회사 우선 시행 後 점진적 확대

- (외환파생거래) 각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감독당국의 세부 가이드라인 보완*

* 예: (은행) KIKO 사태 이후 도입되며, 고객의 오버헤지 방지에 국한된 측면
(금투)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준용 → 파생결합증권 내용 등 부재

업권별 “자체 위험관리기준” 관련 현황 및 개선

| 항목 | 현황 | | | | 개선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|-----|-----|
| | 은행 | 금투업 | 보험업 | | 은행 | 금투업 | 보험업 |
| 외화유동성 | ○ | X ¹⁾ | X ¹⁾ | → | ○ | ○ | ○ |
| 외환파생거래 | △ ²⁾ | △ ²⁾ | ○ | | ○ | ○ | ○ |

* 1) X : 未의무 / 2) △ : 의무 적용하고 있으나, 가이드라인 등 세부 보완 필요

② 개별 금융회사 취약성 보완을 위해 금융그룹 단위 관리체계 도입

-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그룹 전체 단위로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(예: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) 산출 추진

- 유사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회사 지원책 등 마련 유도*

* 예: 금감원의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시 자회사 지원책 적정성 등 점검

③ 비금융기관 기관투자자(주요 연기금·공제회 10여개)의 자체 외화 유동성 관리 역량 제고 유도*

* 예: 체크리스트를 통해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 점검 및 보완 필요사항 발굴

2.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

(1)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개선

◇ 신규 모니터링 지표* 도입을 통해 비은행권 외화 조달·운용 점검 강화

* 지표상 위험요인 발견시 원인 파악 및 필요시 대책 마련

① (「외화자금 조달·소요 지표」) 향후 30일간 외화자금 소요·조달 계획을 점검(月 단위)하여 외화수요, 자체 조달역량 등 모니터링

- 확정·계획된 규모뿐만 아니라, 우발적 외화수요* 등 향후 예상되는 수요도 반영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

* 예: 스트레스 상황(자산가치 급락, 외화차입 조기상환 요구 등)시 발생하는 외화수요

- 우발적 외화수요는 금융회사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주기적(예: 분기)으로 자체 평가·보고하고 금감원이 이를 점검

② (「외화자산-부채 갭 지표」) 외화자산 대비 외화순자산(자산-부채) 비율*을 점검(月 단위)하여 외화자금시장 조달 비중 등 모니터링

* IMF('20.7월), 「Global Banks' Dollar Funding: A Source of Financial Vulnerability」

↳ CCFR(Cross-Currency Funding Ratio, 달러 순자산/달러 자산)이 클수록 외화부채에 의한 직접조달이 아닌 시장에서 조달한 달러자산 규모가 커 취약성 증가

- 이를 통해, 시장충격 발생시 외환·외화자금시장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

③ (「외화조달-운용만기 지표」) “외화조달 및 운용” 만기* 현황을 점검(月 단위)하여 만기 미스매치 등 모니터링

* 현·선물 자산·부채를 모두 포함하고, 회계상 만기가 아닌 실제 잔존만기 적용

⇒ 지표의 정합성, 적시성 확보를 위해 외화자산·부채 규모가 큰 증권·보험사에 우선 도입*하고,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

* 대상 금융회사 외화자산·부채 합이 업권 전체의 70~80% 수준이 되도록 대상 설정

[2]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확대

◇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대상 확대, Bottom-Up 병행

① 현재 국내은행에만 실시 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을 여타 업권 등으로 확대하고, 분기별로 실시

- (대상) 증권·보험업 중 외화자산·부채 규모 등이 큰 금융회사 대상으로 우선 실시*하고,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

* 외은지점도 필요한 경우(예: 단기차입 급증 등)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

- (시나리오) 업권별 특성 및 위험요인에 따라 차별화

※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예시

- ▶ (증권) 파생상품 기초자산 가치 급락(예: 글로벌 증시 $\Delta 20\% \rightarrow \Delta 30\% \rightarrow \Delta 40\%$)
- ▶ (보험) 스왑시장 유동성 급감으로 일정기간(예: 2주) 시장접근 제한
- ▶ (외은지점) 글로벌 달러화 경색 등으로 본점차입 중단, 자금유출 확대

- (사후조치) 테스트 결과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업권별 특성에 맞는 유동성 확충 방안 권고 및 이행상황 점검

※ 업권별 유동성 확충 권고사항 예시

- ▶ (증권) 고유동성자산 확충, 커미티드라인 확대 등
- ▶ (보험) 고유동성자산 처분·회수, 환헤지(조달) 장기화 등
- ▶ (외은지점) 본점 통보 및 외화유동성 확충 등

② 각 금융회사가 “자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설정”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Bottom-Up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도 병행*

* 예: 감독당국이 스트레스 상황을 정하여 실시하는 방식을 반기 1회 이상, 금융회사가 스트레스 상황을 자체 설정하는 방식을 반기 1회 이상

③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, 새로운 위험요인 발견시 이에 적합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·운용하여 사전 위기관리 역량 강화

(3)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점검 강화

◇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관련 점검을 은행권 수준으로 제고

① 금투·보험업에 대해 외환건전성 관련 점검체계 개선

- 은행권 사례를 감안하여 점검사항을 확대하고, 주기도 “분기 → 月” 단위로 단축

업권별 외환건전성 보고사항 및 주기

| 항목 | 현황 | | | 개선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은행 | 금투업 | 보험업 | 은행 | 금투업 | 보험업 |
| 외화유동성 비율 (국내은행은 외화LCR) | 月 | 분기 ¹⁾ | 분기 ¹⁾ | 月 | 月 ³⁾ | 분기 ³⁾ |
| 잔존만기별 외화자산·부채 | 月 (필요시 日) | 분기 | 분기 | 月 (필요시 日) | 月 (필요시 日) | 月 (필요시 日) |
| 외화차입 만기도래 | 月 | x ²⁾ | x ²⁾ | 月 | 月 | x ⁴⁾ |
| 외화자금 조달·운용 | 月 | 분기 | 분기 | 月 | 月 | 月 |
| 외국환포지션 한도 | 月 | 月 | 月 | 月 | 月 | 月 |

- * 1)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, 분기별 보고대상인 만기별 조달운용 현황 자료에서 산출 중
 2) 보고의무 사항 아님
 3) 기존 비율규제 위반이 금투업에 집중 발생한 점 등 감안, 금투업에 우선 보고주기 단축
 4) 보험업은 보험업법상 외화차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서, 보고의무에서 제외

② 필요시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추가 속보성 지표^{*}(日·週 단위)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

- * 예: ¹⁾외화여유자금 현황 및 가용현금포지션 현황 등(현재 은행권 적용 중),
²⁾보험사 외화수요·공급 현황, ³⁾증권사 유동성 상황 등

③ 우발적 외화수요 관련 파생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외환 전산망 보고서 개선 및 활용 제고^{*}

- * 외환전산망 보고서 신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, 우선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체계 마련 (필요시, 외환전산망 보고서 정비를 통해 보고기관 부담 완화 병행)

④ 비금융기관 기관투자자(주요 연기금·공제회 10여개)의 해외증권 투자 모니터링 강화^{*}

- * 비금융기관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해외증권 투자동향을 분석하여 기관간 공유(韓銀), 적시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보고주기 단축(예: 분기→月)

3.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

(1) 기존 규제 미비점 보완

◇ 외화유동성 비율, 외화LCR, 외환건전성 부담금 **종합 재정비**

① (외화유동성 비율) 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방식을 개선하고, 점검대상 및 적시성 등도 강화

- 업권별 감독규정에 외화유동성 자산·부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, 파생상품 증거금* 등 처분이 어려운 자산은 제외

* 자기매매증거금 중 필요증거금만 제외(초과 증거금은 외화유동성자산으로 인정)

-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선물자산·부채도 포함*하여 실효성 제고

* (현행) "현물부채/현물자산 $\geq 1\%$ " → (개선) "현·선물부채/현·선물자산 $\geq 1\%$ "

☞ 현물부채가 적고, 선물부채(환헤지)가 많은 보험사 상당수가 제외되는 문제 개선

- "외화유동성 비율 업무보고서" 신설 등 보고체제도 개선*

*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체 작성하여 보고하는 별도 보고서가 없어 각 금융회사가 비율규제 위반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등 발생

② (외화LCR) 은행 대상으로 현재 月 단위 점검에서 日 단위 점검(잠정치)도 병행 실시하여 속보성 확보*

* 日 단위 점검은 적시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서, 경영지도비율 등 未적용

③ (외환건전성 부담금) 부담금 운영의 탄력성 및 부담금 공제 제도의 효과성 제고 등 추진

- 분할납부 기한(현재: 회계연도 종료후 12개월 내)을 확대하고, 횟수(현재: 2회 분납만 가능) 등의 탄력적 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

- 원/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자에 대한 부담금 공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수요 기반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*

* 예: 현재 은행간 거래실적 기준으로만 인센티브 부여 → 향후 대고객 거래실적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시 반영 등

(2) 리스크 요인별 특화 규제 도입

◇ 증권사 적정 외화자산 의무보유, 보험사 환헤지 관행 개선 등

① (증권사)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의 20% 이상을 외화 유동자산으로 의무 보유

- 유동자산은 단기간내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 외에 즉시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확정된 계약도 인정*

* 외화현금, 외화예금, 美 국공채 + 외화 커미티드라인, FX스왑, 통화스왑 등

② (보험사) 장기 스왑계약을 유도하고, 탄력적 환헤지 지원 병행

- 장기 환헤지 유도를 위해 지급여력비율(RBC) 제도 개편*

* 장기외화자산에 투자하면서 1년 미만 환헤지시 추가적인 자본적립 요구

- 보험사가 금리·상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포지션 규제 완화(現 20 → 30%)

4. 거버넌스 및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개편

(1) 정책협의·추진체계 개선

◇ “외환건전성협의회(가칭)” 신설, 기관별 기능 강화 등

①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의 등을 위해 “외환건전성협의회(가칭)” 신설*

* 참석대상: 기재부(차관 주재)·금융위·韓銀·금감원 부기관장 / 개최주기: 분기 1회

- 각 기관이 각종 규제비율·모니터링 현황,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정보공유 확대
- 위기시에는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외환건전성 정책방향 등 협의·조정

② 외환당국 內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모니터링·분석 및 감독 당국 內 비은행권 외환감독 기능 강화

(2) 다층적 외화유동성 공급망 구축

◇ 금융회사 대외안전자산 활용,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공급방안 보강

① 위기시 증권사의 신용도 보강을 위해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마련*

* 예: 한국증권금융 자체·시장조달 자금, 외환당국 등 → 한국증권금융 → 증권사

- 투자자 외화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의무예치를 명확화*하는 한편, 한국증권금융의 외화 운용능력도 제고

*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외화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의무예치 명확화

- 감독당국의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외환건전성 관리·감독 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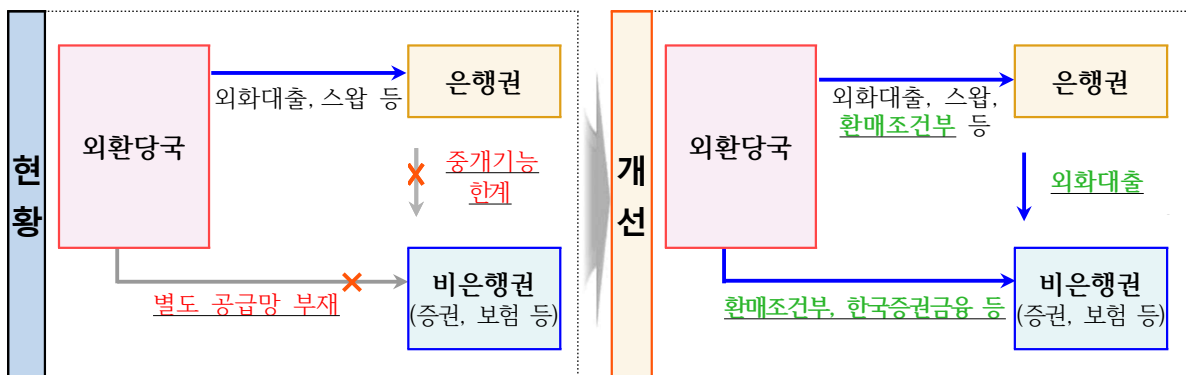
②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증권사의 외화증거금 납부 등 해외 용도가 분명한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의 외화대출 지원 (既조치*)

* 한국은행 「외화대출 취급지침」 상 해외실수요 외화대출 항목에 “해외 파생상품 증거금 납입”을 명시적으로 추가('20.9.14일자 시행)

③ 외환당국의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마련 (既발표)

- 보험사가 스왑만기 前 일정기간 동안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

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현황 및 개선



IV. 향후 계획 및 조치 사항

| 추진 과제 | 조치 사항 (개정 필요 법령 등) | 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. 금융회사 관리·대응 역량 제고 | | |
| ❶ 금융회사별 자체 위험관리 강화 | 은행·금투·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| '21년중 |
| ❷ 금융그룹 단위 관리·대응 체계 마련 | 세부방안 마련 | '21년중 |
| ❸ 비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관리 역량 제고 유도 | - | '21.上 |
| 2.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| | |
| (1)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개선 | | |
| ❶ 「외화자금 조달·소요 지표」 | 외국환거래법 시행령·규정 | '21.上 |
| ❷ 「외화자산-부채 갭 지표」 | | |
| ❸ 「외화조달-운용만기 지표」 | | |
| (2)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확대 | | |
| ❶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대상 확대 | 세부방안 마련 | '21.上 |
| ❷ "Bottom-Up" 스트레스 테스트 병행 | 시범 실시 등 | '21.下 |
| ❸ 모니터링 지표와 연계 강화 | | |
| (3)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점검 강화 | | |
| ❶ 비은행권 점검사항 확대 및 주기 단축 | 금투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,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| '21년중 ¹⁾ |
| ❷ 비은행권 속보성 지표 탄력 운용 | - | 향후 탄력 적용 |

1) 점검사항별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회사 업무부담 등을 감안해 단계적·탄력적 적용

| 추진 과제 | 조치 사항 (개정 필요 법령 등) | 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③ 외환전산망 개선 및 활용 제고 | FX보고서 정비·신설 | '21말 |
| ④ 비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| 외국환거래규정 | '21.上 |
| 3.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 | | |
| (1) 기존 규제 미비점 보완 | | |
| ① 외화유동성 비율 | 금융지주·보험·금투업 감독규정시행세칙 | '21.下 |
| ② 외화LCR | - | '21.上 |
| ③ 외환건전성 부담금 | 외국환거래법 시행령·규정 | '21.下 |
| (2) 리스크 요인별 특화 규제 도입 | | |
| ① 증권사 적정 외화자산 의무 보유 | 금투업규정·시행세칙 또는 협회규정 | '21.上 |
| ② 보험사 장기 환헤지 유도 | RBC 개편방안 마련·추진 | '21년중 |
| ③ 보험사 탄력적 환헤지 지원 |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| '21.上 |
| 4. 거버넌스 및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개편 | | |
| (1) 정책협의·추진체계 개선 | | |
| ① 외환건전성협의회(가칭) 신설 | 외국환거래법 시행령·규정 | '21.上 |
| ② 외환당국·감독당국 기능 강화 | - | '21년중 |
| (2) 다층적 외화유동성 공급망 구축 | | |
| ①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 마련 | 외국환거래규정 세부방안 마련 | '21.上 '21년중 |
| ② 은행의 비은행권 실수요 외화대출 지원 | 외화대출 취급지침 | 既조치 |
| ③ 환매조건부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망 도입 | 보험업법 시행령 유권해석 | '21.上 |

참고 2

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변화

